



# 주간 통일정세

2007-01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관련    2. 주변국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국제적 수해지원 관련 적극적 반응 태도 표명

- 北, 국제사회 수해지원에 사의 표명(9/5, 조선중앙통신)
  - 지난달 대규모 수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국제사회에 포괄적으로 사의 표명
  -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중국, 미국, 유럽동맹(EU), 러시아, 호주, 이집트 등 많은 나라들이 의약품을 포함한 긴급협조를 성의껏 제공해 주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외무성 대변인)
  - 남한의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긴급 구호와 지원 사실에 대한 언급 전무

#### 나. 김정일 동향

- 김정일의 현지지도 활동 증가
  - “우리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복철 강행군은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무한한 헌신, 불면불휴의 노고로 수놓아진 위대한 혁명행로”라고 전하면서 김정일의 현지지도 관련, 선전활동 강화(9/7 평양방송)
    - ※ 8월 김정일의 공개활동은 17회로 집계되며 이는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이며 월별 공개활동은 1월(7회), 2월(2회), 3월(6회), 4월(6회), 5월(2회), 6월(6회), 7월(4회) 수준이었음
  - 8월 중 김정일의 공개활동은 주로 경제부문 시찰(9회)에 편중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에 비해 군부대 시찰은 5회로 상대적으로 저조

#### 다. 체제단속 강조 위한 사상교양 부문 활동 강화

-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비난 강화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 관련,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 제도를 와해·붕괴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은 인민들을 비민주주의적인 억압정권의 지배하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강도적 교리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으며 반테러전을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9/3, 평양방송)
  - 박 의춘 외무상도 지난 4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인권 및 문화다양성’에 관한 비동맹운동(NAM)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미국 등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은 “인권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동맹운동 참여국가들이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과 이중기준



적용을 반대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힘(9/6, 조선중앙통신)

- 외국정보요원과 내부첩자들 체포 관련, 이례적 보도(9/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요원”과 이들의 “조종을 받던 (북한 주민인) 첩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이 사용하던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정탐장비 등을 압수했으며
  - “이 외국정보기관은 조선의 최고 이익과 관계되는 중요 군사 대상물,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첩보모략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제3국을 드나드는 공화국 공민가운데서 일부 불건전한 자들을 금품과 여색(매춘), 협박공갈로 흡수해 고용 간첩으로 전략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이 외국 정보기관’ 요원의 구체적 국적에 대해서는 함구
  - 북한의 관련 당국이 군사시설 정탐 등의 혐의로 내·외국인 간첩 체포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외에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

- 대외 부정적 영향력 파급 단속을 위한 선전선동 활동 강화
  - 북한 당국은 대내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외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평화, 협력, 원조 등에 속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사상단속에 부심
  - “제국주의자들이 마치도 저들의 지배주의적 본성이 변한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에게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 타령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고 망국이며 예측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 대는 ‘원조’와 ‘협력’에 대해서도 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9/6 노동신문)
  - 이는 북한 당국이 대미관계 개선 노력 여파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 라. 교육관련 선전 강화

- 북한의 학위 소유자 증가 선전
  -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9/5)된 지 30년 만에 국가 학위 소유자가 25배로 늘어난 성과 달성했다고 보도(9/4, 조선중앙통신)
  -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우리의 교육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정보화시대 교육 중요성 강조
  -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도로 실현되고 정보산업이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될 정보산업시대에 국력은 정치, 군사력과 함께 교육에 의하여 결정될 것”(9/4, 노동신문)



- 컴퓨터 및 외국어 조기교육 강화의지 표명
  - 그동안 북한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내년부터 소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9/6, 조선신보)

#### 마. 정권 창건기념일(9.9) 59돌 행사관련

- 보고대회 개최
  -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격식 군 총참모장, 최태복. 김중린.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 당.정.군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으나 김정일 위원장 불참(9/9 조선중앙방송)

- 각종 기념회 개최

- 9.9절 전야인 8일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창건일 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열었으며, 당과 군대. 국가 간부, 평양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간부, 조선인민군 장병, 과학.교육.문화예술.보건.출판보도부문 관계자와 평양시 근로자 등이 관람 (9/9 조선중앙방송)

## 2. 대외정세

### 가. 북·미관계 관련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 이후 김계관, 핵불능화 실현 의사 명백하게 확인 (9/2, 연합)
  - “우리는 합의한 대로 우리의 핵 계획(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무력화(불능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고 하였으며
  - “미국측은 그들이 약속한 정치·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밝혔음

- 北, 핵불능화·테러지원국 삭제 합의 발표(9/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제네바 실무그룹회의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북)미 쌍방은 연내에 우리의 현존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토의하고, 합의하였다”면서 “그에 따라 미국은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하고 적성국 무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과 같은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설명

- 미 집권자(부시 대통령)에 대한 성토(9/5, 조선중앙통신)



- 9월 8일이 1945년 광복 후 미군의 한반도 진주 62주년이 되는 날임을 상기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미 해외참전용사회(VFW) 연례모임 연설에서 미국의 한국전 개입이 없었다면 “수백만명의 한국인들은 지금 잔인하고 폭압적인 정권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를 자극하는 망발”이라거나 “비방하는 망언”이라고 주장
-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대는 대신 “미국 집권자”라고만 표현함으로써 부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태도를 견지

#### 나. 북·일관계 관련: 일본의 협조 필요성과 대일 비난의 이중적 태도 유지

- 北·日협조 필요성 강조와 대일협력 관련 구체적 요구 피력
  - ‘조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 수상인 고이즈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조(북)·일 두 나라 관계에서 우려를 없애고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주장 (금수강산, 9월호)
  - 일본 변화하면 북한도 적극 호응할 것(9/7, 조선신보)
  - 조총련, 수해지원 위해 북한선박 입항 허락 요청(9/6, 교도통신)
  - 북일 실무그룹회의, 5일 청산문제, 6일 납치문제 논의(9/6, 연합)
- 대일비난 강화(9/4, 노동신문; 민주조선)
  - 일본 아베 정부의 국방·외교 정책은 ‘아시아에 대한 군사·경제적 제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특히 일본의 ‘가치관 외교’에 대해 “과거 청산은 한사코 회피하면서 사탕발림의 ‘가치관 외교’로 아시아 나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비난 (9/4, 노동신문)
  - 민주조선 논평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군사 대국화를 다그침으로써 지역의 패권자로 등장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 근거로 “현재 일본 주변 지역에는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나라나 또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성토

### 3. 대남정세

#### 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 평양-개성 고속도로 조기 복구 (9/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박정선 부국장은 “성에서는 큰물 피해 복구에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해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전투를 벌였다”며 “평양-원산 관광도로와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향산 관광도로를 보수해서 정상운행을 보장하고 있



다”고 밝힘

- 정상회담 참관지 후보 제시
  - 북한은 정상회담 참관 후보지 관련, 대체로 무난한 곳들로, 금수산기념궁전이나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등 민감한 장소들은 후보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나. 남북교류협력

- 북한, 광산 2차 조사 실무협회 연기 요청(9/3, 연합)
  -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측이 오늘 오후 특별한 이유 없이 내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인 실무협의를 연기하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에 대한 2차 현지 공동조사 관련 남북 실무협의(개성, 9/4)가 무기 연기
- 북한 민화협의 대북긴급지원 요청 및 대북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9/5, 연합)
  -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이충복 부회장은 “북구자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측 민간지원 단체들에 주택과 건물 복구에 필요한 자재 중심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미·북 관계

- NYT, 북핵 불능화 되면 부시의 중요한 외교적 승리(9/3)
  -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올해 안에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일정을 지킨다면 부시 미 행정부에게는 중요한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음.
- 미 국무부, 북 테러지원국 삭제 정해진 것 없어(9/4)
  -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한 날짜나 때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북한 비핵화가 더 추진돼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 WSJ, “북핵 문제 해결 전에 부시 임기 끝날 것”(9/4)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날 사설에서 미·북이 2일 제네바에서 협상을 갖고 합의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실제로 투명하게 공개하기 전에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힐, 6자회담 2주후 개최 예상(9/4)
  -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자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주 시드니를 방문, 차기 북핵 6자회담은 앞으로 2주 후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미·중·러 핵기술진, 영변 방문(9/11~15)
  - 미·중·러 핵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기술적 문제 처리를 점검할 예정임.

#### 나. 중·북 관계

- 제3차 경제무역협조회의 개최(9/4~7)
  - 중·북 양국은 4일부터 베이징에서 제3차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북한 측에서는 리용남 무역성 부상을 포함한 10명의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천젠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를 대표로 하는 중국 측과 최근 중국이 발표(8.20)한 「동북진흥 추진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 협조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다. 일·북 관계

-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개최(9/5~6)
  - 일·북 양국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갖고 앞으로 국교정상화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
  -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 북한 측은 강제연행과 군대위안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과는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 측은 식민지 시대의 재산과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일본이 경제협력하는 ‘일괄해결·경제협력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음.
  - 주요 의제인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 양측은 종전 입장을 고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측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등 북한 측이 중시하는 ‘과거청산’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납치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북한 측에 긍정적인 자세를 촉구했음.



- 북한 측 대표단의 김철호 외무성 아시아국 부국장은 “북·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여서 납치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북·일 관계가 원만해져 신뢰관계가 구축될 경우에만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 일, 조총련의 수해지원 북한 선박 입항 허락요청 거부(9/6)
  - 「교도통신」은 조총련이 북한의 수해지원 물자 수송을 위해 경제제재로 전면 금지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예외적으로 허락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일본 정부가 접수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음.
- 일, 대북 경제제재 6개월 연장 방침(9/8)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13일이 만기인 대북 경제제재 시한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 이런 결정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 라. 러·북 관계

- 러, TSR-TKR 연계 등 철도현대화 박차(9/4)
  -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계운행을 포함해 자국 철도 현대화에 2030년까지 모두 5,06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대적인 계획을 공개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APEC 정상회의 개최(9/8~9, 시드니)

- 미·중 정상회담 개최(9/6)
  -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부시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가졌음.
  -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책, 중국산 식품과 제품의 안전성 문제, 중국의 인권문제, 6자회담 상황 등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했음.
  - 양국 정상은 지난 몇 달 간 이루어진 6자회담 진전에 대해 아주 대단히 기뻐했고,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에 만족감을 표시했음.
- 부시, 북한의 민주화·자유화 촉구(9/7)
  - 부시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일정의 하나로 개최된 ‘세계 정상회의’ 연설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문을 배포했음.
  - 부시 대통령은 아·태 지역 국가들에 북한의 민주주의와 북한 주민들



의 자유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새로운 아·태 민주주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제안했음.

- 중국에 대해서는 내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더 많은 개방과 관용 정책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음.
-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 아래 있는 중동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음.

● 한·미 정상회담 개최(9/7)

-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면 북한과의 정식 평화조약 체결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21개국 정상들, ‘시드니 APEC 정상선언’ 채택(9/9)

-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의 조속한 타결과 기후변화에 대처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에 합의하고 이들간의 회의를 폐막했음.
- 또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타진하기로 했음.
- 정상들은 이와 함께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청정개발에 관한 시드니 APEC 정상선언’을 채택했음.

나. 중·일 관계

● 자칭린 정협 주석, 방일(9/12~18)

- 중국 외교부는 중국 권력서열 4위의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음(9/6).
-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우호방문 하는 자칭린 주석은 아베 총리 등 고위급과 회담을 가질 예정임.
- 금년 원자바오 총리(4/11~13), 차오강환 국방부장(8/29~9/2), 자칭린 정협 주석의 방일로 냉랭했던 중·일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되고 있음.